

롯데카드, 영업정지 수위 ‘촉각’… 내일 해킹 제재안 결정

지난해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최종심의 핵심쟁점 ‘유출 반복성’
인정편 영업정지 4.5개월 현실화
금융위서 제재안 경감 가능성도

지난해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최종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이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롯데카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최종 심의한다.

앞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외부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중징계안을 의결한 뒤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롯데카드 본사 전경. /롯데카드

절차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안전소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당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유출 사고의 ‘반복성’ 여부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내부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에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약 11년 전

발생한 사고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 역대 최장기간인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도 금감원 처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성을 인정한다면 4.5개월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측은 반복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사고는 내부 직원의 일탈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였다면, 이번은 외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라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를 소명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안전소위 일정을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정례회의 일정 역시 이달 29일에서 3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를 두고 제재 수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행정 제재 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심 기준 금융위 행정소송 건수(신규)는 지난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85건까지 확대됐다. 최근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금융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금융위로서는 제재 적정성을 더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4.5개월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영업 차질과 매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과거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롯데카드 제재안이 경감 없이 확정될 경우 두 카드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엄격한 기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신용 줄 하향에도… 저축은행 ‘흑자 전환’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6곳
상반기 순익 합계 254억 규모
본업 경쟁력, 비용 효율화 효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본업 경쟁력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29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KB·우리·하나·농협·IBK)의 상반기 순이익 합계는 254억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1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전체 순이익이 449억원 개선되며 흑자 전환했다.

사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순익 개선세가 뚜렷하다. 하나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231억원)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43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저축은행도 -43억원에서 3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IBK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53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손실 규모가 -164억원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신한저축은행과 우리저축은행은 당기 순이익 134억원,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1억원씩 확대됐다. 다만, KB저축은행은 흑자를 냈던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주사 저축은행이 2~3차례 세 자릿수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순익 증가 배경으로는 본업 경쟁력 강화, 비용 효율화 등이 꼽힌다.

먼저, 신한저축은행은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순이익을 확대했다. 신한저축은행의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7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증가했다. 특히, 이자이익은 792억원에서 809억원으로 늘었

으며, 비이자이익의 경우 지난해 -59억원에서 -5억원으로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로 순이익을 개선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당금 비용을 반 이상 줄였다. 대손충당금 비용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8% 줄었다. NH농협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75.39%였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6월 말 기준 69.67%로 축소했다.

IBK저축은행은 외형 성장으로 수익성 자산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 IB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18억원 증가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디지털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현송 총재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야”

한은, 물가·경기 점검 후 결정키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치인 2.6%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

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 총재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1.1%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난 5월 전망치인 2.6%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



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는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압력은 한층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에서 6월 3.2%까지 높아졌다. 6월 근원물가는 2.5%, 생활물가는 3.4% 상승했다.

신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민 40% 땅 보유… 60대, 소유면적 최대

국토부, 2025년 말 토지소유현황
총 소유자 2012만명 2.4%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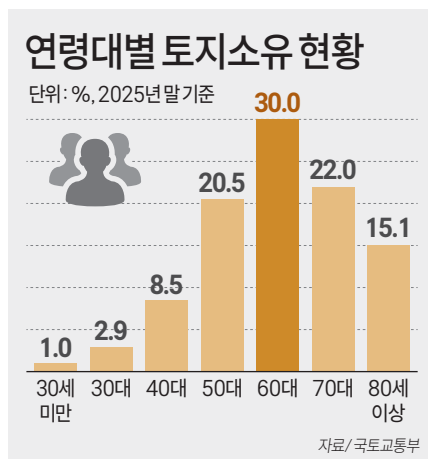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토지 소유자가 늘어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가 소유한 개인 토지 면적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토지 소유자는 201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47만명(2.4%)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 6127㎢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개인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9%였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30만가구 가운데 1565만가구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소유 가구의 비율은 전년보다 35만가구(2.3%)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전년보다 2.5% 줄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소유 면적이 1만 3860㎢(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1만141㎢로 22.0%, 50대가 9443㎢로 20.5%를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토지 소유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54.3%, 여성이 45.7%였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463㎢로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2443㎢로 가장 많았고, 지목별로는 임야가 3460㎢로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46.4%를 차지했다.

면적 규모별로 1000~5000㎡ 보유 법인이 8만7000개(23.0%)로 가장 많았으며, 가액 규모별로는 1억~5억원 보유 법인이 10만개(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중과 종교단체 등 비법인인이 소유한 토지는 7823㎢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농림지역이 4446㎢, 임야가 7228㎢로 각각 56.8%, 92.4%를 차지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우리은행, 직원 절세상품 실무 연수

고객에 전문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우리은행이 전국 26개 영업본부에서 전 직원을 위한 절세상품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직원들의 상담 역량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전국 26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본부부서의 자산관리(WM) 전문가가 각 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절세 혜택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

하우와 상담 경험을 공유하며,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절세 혜택 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재무 상황에 맞는 절세 혜택과 상품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충분한 안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안승진 기자 asj231@